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3월 24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안전상황실	담 당 자	• 안전기획팀장 김수진 ☎440-5731 • 담당자 김은정 ☎440-573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관련 조치사항 논의 - 24일 ‘시민안전정책회의’ 서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협력체계 강화하기로 - - 봄철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인파관리 위한 시군구소방경찰 협력체계 점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시, 군·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21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전문가와 국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을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참여와 협업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전

략과 65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과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와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앞으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봄철을 맞아해 지역 축제와 문화·체육행사 등 야외 행사가 많아지면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현장 인파 질서유지 등의 기관별 역할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군·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세부추진과제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면서, “봄철 다중밀집 행사의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회의(17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동 보고서는 지난 1월 27에 최초로 발표한 것(요약본)입니다.

3월 중 안전 관련 중요 회의체*의 심의를 거쳐 대책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동력을 강화하여 대책의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종 보고서는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국가 안전시스템 진단	2
III. 비전과 추진전략	4
IV.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방안	5
<특별대책>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_	5
<전략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_	7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_	9
<전략3>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_	11
<전략4>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_	13
<전략5>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_	14
V. 향후계획	15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
 - ※ (VIP 지시) 안전관리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2.11.7.)

□ 추진 배경

- 이태원 참사('22.10.29.) 시 선제적 위험관리, 초기대응 및 현장대처, 기관간 협력체계 등 문제점 노출
 - ☞ 이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기후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대두 등 환경변화로 재난의 복합화·대형화 및 위험사회화* 현상 발생
 - * 위험사회(Ulich Beck):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현대 사회
 - ☞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편 추진

□ 추진 경과

-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구성* · 운영(11.18.~)
 - *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 참여
 - 전체 회의(6회) 및 분과별* 회의(19회)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 토론과 검토를 거쳐 종합대책(안) 마련
 - *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역량 강화 △과학적 재난관리 △제도개선·안전 문화
- ‘안전신문고(11.15.~12.31)’, ‘ON국민소통(11.23~12.5)’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대책에 반영
 - ※ △안전신문고 1,672건(12.31. 기준) △ON 국민소통 220건 등

<지자체 및 국민제안 반영과제 예시>

- ▶ (지자체) ▲시·도에 실질적 자치경찰 도입 ▲시·군·구 재난상황실 및 전담조직 설치
- ▶ (국민제안) ▲지역(시군구)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기관통합대응 체계 마련 ▲지자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위험지역 발굴 ▲반복적인 교육·훈련 ▲성인대상 교육기회 마련

Ⅱ. 국가안전시스템 진단

① 선제적 위험관리 미흡

- 그간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난(폭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재난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선례없는 재난 가능성 계속 증가
- 반복되는 대형사고에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는 부족

②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역할의 불균형

- 중앙 중심의 하향식(Top-Down) 재난관리체제로 지역·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에 한계
 - 여러 차례 제도 개선*에도 지역·현장의 작동성 문제가 지속 제기
-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15년),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19년),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20년) 등

③ 경험 기반 재난관리의 한계

- 협력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에도 재난관련 데이터 공유·활용 부족
- ※ 데이터의 연계·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관별·시스템별로 데이터 분산관리
- 과거 경험에 기반한 재난예측과 대응으로는 효과적 재난관리에 한계

④ 실질적인 재난 피해지원 및 안전취약계층 보호 부족

- 공공시설의 물리적 복구와 제한적인 피해자 지원만으로는 피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와 실질적 지역공동체의 회복에는 역부족
- ※ 주요 국가는 공동체 중심의 재난경감 및 적응력을 키우는 회복력(resilience)을 강조
- 안전취약계층(고령층·외국인 등)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⑤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과 행동요령 숙지 부족

- 현행 학생 위주, 공급자 중심의 안전교육은 국민 행동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
 - 생활 속 고질적 안전경시 문화*로 생활 속 안전사고 발생
- * 불법주정차, 비상구 물건 적치, 과속운전,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 국가안전시스템 진단 결과(요약) 》

- ◇ 「재난·사회환경 변화」, 「현 안전관리체계 진단」, 「이태원 참사 진단」 등을 종합할 때 **“예측과 회복 중심”, “디지털 전환”, “전 국민 실천·행동”** 등을 수반하는 **안전시스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

국가안전시스템 진단	재난·사회 환경 변화	안전관리체계 진단	이태원 참사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환경의 변화 (대형화·복합화·일상화 등) ■ 안전취약계층 증가 ■ 과학기술의 발전 ■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 미흡 ■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역할의 불균형 ■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재난안전관리 ■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실질적인 피해지원 미흡 ■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과 재난 시 행동요령 숙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파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부재 ■ 안전 저해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미흡 ■ 신고 접수 후 상황인지 지연 ■ 상황공유 및 지자체 상황관리 혼선 ■ 1차 대응기관 초기대응 미흡 ■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안전패러다임 전환	「관점」 大 전환	「방식」 大 전환	「행동(실천)」 大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상시적 재난관리로 전환 ▶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플랫폼,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 ▶ 정부(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소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 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 확산

Ⅲ. 비전과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비전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목표	<p>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p> <p>▶ '27년 10만명당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0명내 감축*</p> <p>* '19년 기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OECD 평균 22.1명 / 한국 26.2명</p>		
기본 방향	「관점」大 전환	「방식」大 전환	「행동(실천)」大 전환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상시적 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과학 기반, 쉴 사회 구성원 참여	온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 확산

2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소를 상시 발굴·예측하는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 ■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 네트워크 사회 대비 재난관리체계 강화
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상시 상황관리체계 구축 ■ 현장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지역·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편 및 역량 강화
3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4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재난피해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5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 생애주기 안전교육의 내실화 ■ 자발적 국민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

Ⅳ.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방안

특별대책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 종합대책 5대 전략 65개 과제 中 상당수 과제가 인파사고 예방과 직접 관련
☞ 단계별로 입체적인 대책을 통해 인파사고 가능성 사전 차단

□ <사전예방>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매뉴얼 개선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전략 1-②)
 -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 상 재난유형에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
 -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
 - ▲다중운집 매뉴얼 등 관련 지침 개정
-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선(전략 2-⑤)
 - ▲지역별 위험 특성을 매뉴얼에 반영
 - ▲디지털화·원페이퍼화 및 주요 기능별 공통 대응계획 마련

□ <위험판단> 위험상황 조기파악 체계 구축

-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위험상황 조기파악 체계 구축
 -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전략 1-②)
 - ▲지능형 CCTV 확충(보급률 '23년 24% ⇒ '27년 100%) (전략 2-①)
- 빠짐없는 위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대처(전략 2-②)
 - ▲112·119 영상신고 활성화
 -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 <상황공유 및 대응> 신속한 상황 공유 및 협업 기반 대응

- 보고체계 및 상황전파 개선(전략 2-②)
 - ▲보고 지연 시 차상위자 직접 보고
 - ▲시도 단위 경찰-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 파견
 - ▲"긴급" 공동대응 요청 시 소방·경찰의 현장 확인 의무화
- CCTV 개선 등을 통한 현장 재난상황관리 강화(전략 2-①)
 - ▲CCTV를 재난 예방·관리에 공동활용토록 법·제도 정비
 -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간 시스템 연계

- 인명보호 중심 신속한 구조 구급(전략 2-2)
 - ▲최적화된 환자이송을 위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 ▲지자체-소방-경찰-재난의료지원팀(DMAT) 정기 합동 훈련
-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간 활용 강화(전략 2-2)
 - ▲상황실 간 재난안전통신망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
 -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기적 실전적 훈련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과 연계한 위험징후 자동 알림 기능 개발

□ <후속조치> 실질적 피해지원과 맞춤형 지원

- 재난구호 심리지원 확대·강화(전략 4-2)
 -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심리지원
 - ▲현장요원, 재난목격자 등으로 심리지원 대상 확대
- 피해자·유가족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전략 4-2)
 - ▲피해자·유가족 대상 적극적 정보 제공(유가족 명단의 체계적인 확보 등 포함)
 - ▲피해지원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다양한 창구 일원화)
 - ▲국적, 직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기준 마련

□ <대응역량>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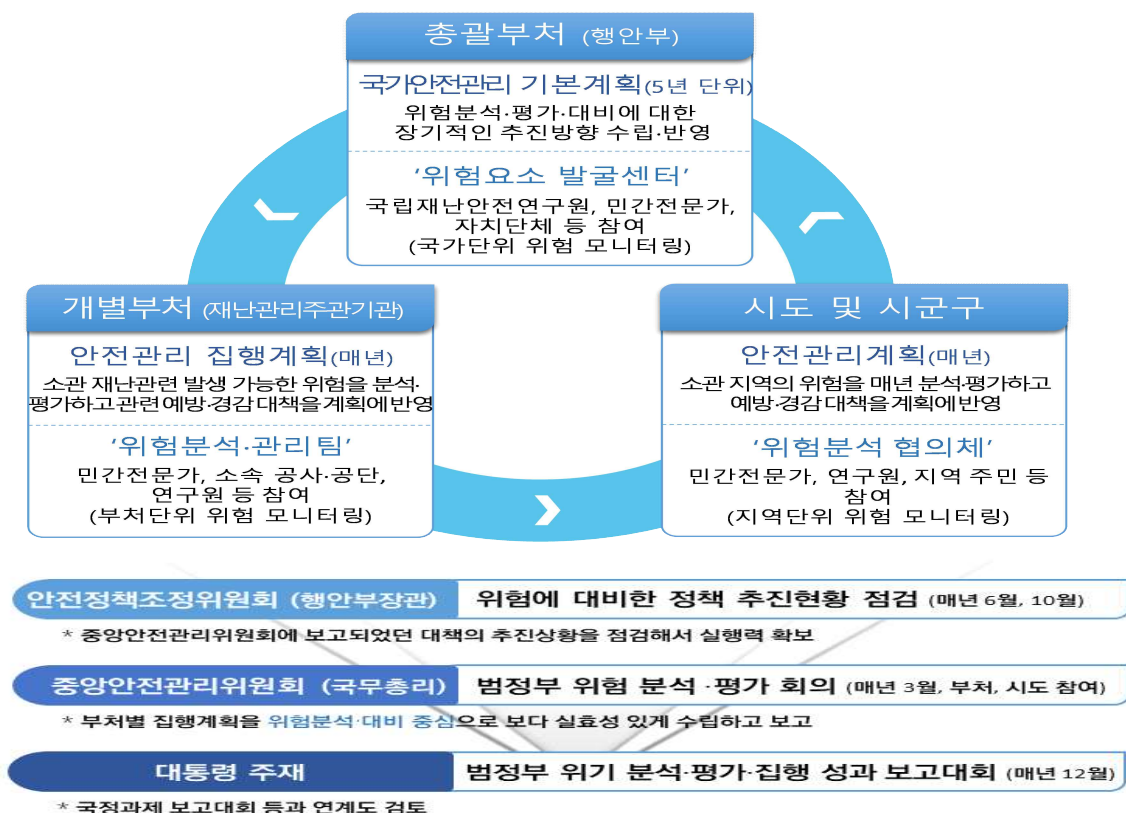
- 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전략 2-1)
 - ▲쉴 시군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자치단체 상황실-CCTV 통합관제센터 간 정보공유
-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권한 및 역량 강화(전략 2-3)
 -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직무안내서 내용 보강
- 경찰·소방의 지역·현장 재난안전관리 역할 확대(전략 2-3)
 - ▲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파관리 등 생활안전기능 강화
- 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전략 2-4)
 - ▲재난안전인력 확충 및 재배치, 처우개선 ▲현장 실무중심의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내실화(전략 5-1)
 - ▲법정 안전교육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신종 안전사고 유형을 추가

전략 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1 신종위험 발굴·예측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

- (신종위험 발굴) 「(가칭)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위험분석 실시(~'23.上)
 - 발굴한 신종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예·경보체계 및 예측·관리시스템 구축, 위기관리 매뉴얼 등 대응체계 마련
- (신종위험 관리) 행안부·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기반으로 국가위험상황의 선제적 관리와 실질적 대비체계 구축(~'23.上)
 - 부처별·지역별 위험분석 결과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 (행안부) 민간전문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과 협업해 위험관리를 총괄
 - ** (개별부처·지자체) 전문가, 연구원 등과 협업, 소관 재난분야, 지역 위험을 분석·대비

< 범정부 국가 위험분석 및 평가·관리 추진체계(안) >



② 인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보강

- (제도 개선) 인파사고를 재난유형에 포함,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지자체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마련(~'23)
-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기지국 접속 정보(유동인구)등을 통해 ICT 기반으로 밀집위험을 감지하고 전파하는 시스템 확대 운영(~'23) 및 고도화(~'24)*
 -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시범 운영 후 시스템 확대 운영 / 인공지능 기반 전조 감지, 112 신고 연계, 이상행동 인식 추적 등 단계적 고도화 추진



③ 기후 위기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강화

- (예측역량 제고) AI기반 홍수 예보체계 구축(~'25), 수치예보기술 개발(~'26) 등으로 예보 정확도 향상
- (예방인프라 확충) 방재성능목표 상향 및 적용 확대*, 홍수취약지구 정비 확대('23년, 5,010억),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구축 등 추진
 - * 방재성능목표 대상 지역을 169개에서 238개로 확대 적용

④ 디지털·네트워크 사회의 신종 위험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센터 안전강화) 중요통신시설 통신망 이원화('23년), 화재 예방·탐지 개선 및 전력공급 안전성 강화 등 예방책 실시
- (기능연속성 확보) 전국적 유선망 장애시 타사 경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호백업 체계 단계적 확대

⑤ 예측·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 (재난안전 투자 확대) 안전 SOC 보강 및 지역별 안전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종합투자계획 수립·추진(지자체→행안부→중앙안전관리위원회)
 - * (예) 사고위험 보행환경, 화재취약 전통시장,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 등
- (재원 확대) 지자체의 소방·안전 시설·장비 보강 등 재난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재원 확충방안 검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안전투자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범위 확대('22년방재시설 2종 → '23년 모든 방재시설)

전략 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1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상황관리체계 구축

- (상황관리 강화) 모든 기초지자체에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 ※ (현행) 228개 시군구 중 49개 상황실 운영 → (개선) 쏘 시군구 상황실 운영
- (CCTV 활용 강화) 다양한 목적별 CCTV를 재난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스템 등 개선 추진
 - (제도) CCTV영상을 재난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정비
 - (시스템)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기관 간 관제시스템 연계 확대
 - ※ 지자체-경찰-소방 연계(現 123개 → 228개), CCTV-NDMS 연계(現 7개 시도 → 쏘 시도)
 - (고도화) 행동패턴, 이상음원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 관제 체계로 전환
 - ※ (현재) CCTV 53만대 중 지능형 13만대(24%) → (~'27년) 노후 CCTV 우선 교체 및 지능형 CCTV로 100% 전환

2 현장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소통 및 협력 강화

- (신고체계 개선) 112·119 영상신고 활성화 및 기관간 신고 영상 공유체계 마련('23),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통한 위험징후 인지 강화
 - * 1시간 내 반경 50m내 3건 이상 신고 시 112시스템 폴맵에 자동 표출
- (보고체계 개선) 경찰의 행안부·시도 등에 대한 재난상황 통보 대상·범위 확대, 내부 보고 지연 시 차상위자에게 직접 보고 등 보고 라인 복선화
- (협력·공유 강화) 경찰·소방 간 “긴급 공동대응” 요청 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중요정보의 신속 공유를 위해 상황실 상호 연락관 파견 등('23)
- (구조구급체계 개선)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신속한 현장 출동, 체계적 의료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구급체계 개선('23)
 - ※ 구급지휘팀(소방) 운영, 응급환자 이송단계와 응급실 진료단계 간 정보 연계 등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관련기관 상황실 간 재난안전통신망을 상시통신망으로 활용 의무화, 정기적 실전형 훈련(주 1회) 실시('23)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하여 위험징후 자동알림 기능 개발

③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편

- (지자체장 권한강화)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한 부여, 선포시 경찰·소방 등 공동대응 총괄(~'24), 지역안전위원회 내실화*('23)
* 지자체, 경찰, 소방 중심 실무위원회 활성화로 평시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장 역량강화)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역할을 직무안내서에 반영
- (자치경찰 본격시행) 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파 사고 관리 등 경찰의 지역 안전관리 역할 및 현장중심 재난관리 강화
※ 세종·강원·제주부터 시범 실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전 시·도 확대 시행

④ 지역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재난안전관리 전담인력의 단계적 확충 및 재배치, 관련 수당 인상, 승진 가점 등 처우개선 지속 추진
※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조정, 관계부처 및 중앙-지방 간 교류·파견 확대
- (지원조직 보강) 「지역안전관리단*」 확대, 재난안전분야 경험자로 「재난안전상비군」 운영 검토, 시도 연구원 및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정책 개발 강화
* 대학, 전문가, 유관기관과 위험 점검·관리업무 수행 / 현재 7개 지자체 운영중
- (읍면동 안전관리 강화) 안전 취약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개편,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 구성 등 기능 강화
* 이통장 등 이웃을 잘 아는 지역민으로 구성, 지역 내 위험요인을 촘촘히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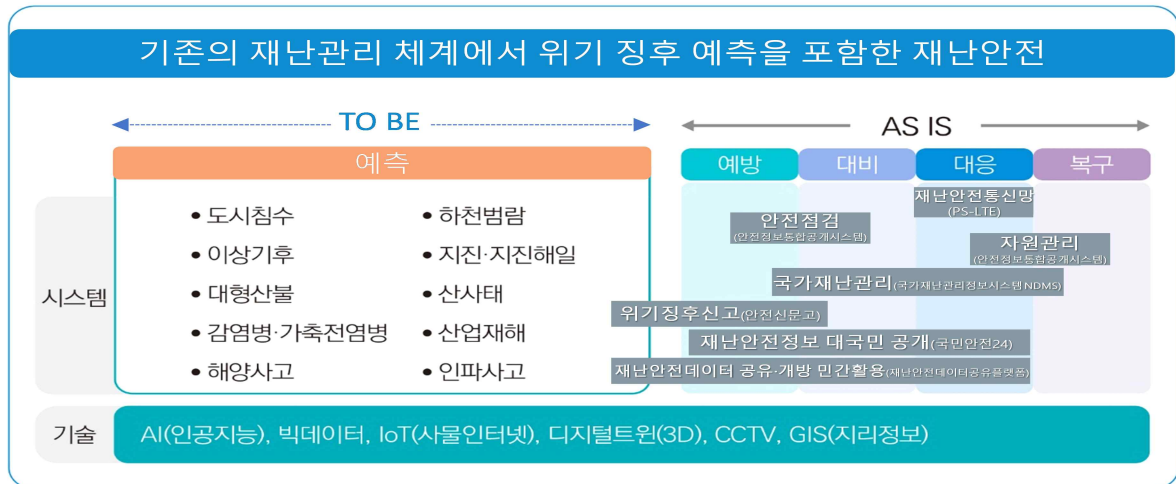
⑤ 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 (매뉴얼 개선) 주요 기능별 공통 대응계획* 마련 및 디지털화·원페이지화,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작동성 강화
* 재난유형별이 아닌 전 재해에 적용 가능한 공통기능(교통, 통신, 복구 등) 중심
- (훈련 개선) 신종·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이슈별(침수, 고속철도 터널사고 등) 중점훈련 실시
- (재난대응자원 통합관리) 대규모 재난 시 적기에 소요 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17개 시·도)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
※ 가칭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 마련('23년)

전략 3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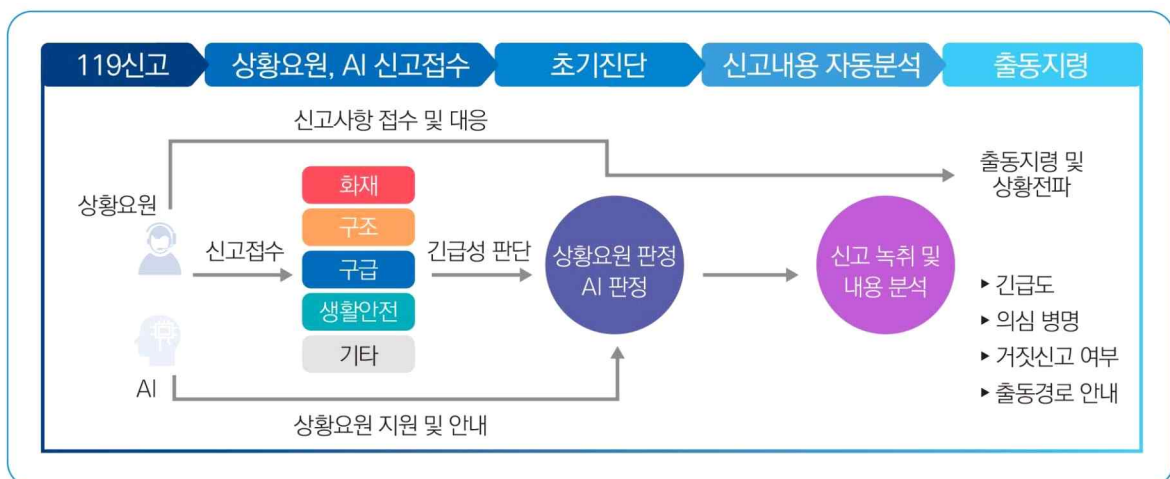
1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 및 대응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선제적 재난 예측) 스마트 예측·감지(관측망 확충, 예측 모델 고도화),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지능형CCTV, AI,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재난 예측 분야 ICT 기술 최대 활용



- (구조 현장대응 지원) AI와 융합한 상황 분석, 관계기관 실시간 정보공유 등 최적화된 이송정보 제공, 위치탐색* 고도화로 지원 강화

* GPS 추적 곤란 지역, 주소기반 이동경로와 측위기술 연계로 구조자 상세위치 파악



- (재난관리시스템 통합) 개별 운영되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가칭)재난관리24’로 통합 개편(‘24년~)
⇒ 통합적 업무처리 및 모바일 업무환경 지원 등 고도화

② 디지털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 (공유플랫폼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58개 기관)별 데이터를 모두 공유해 활용하는 통합DB 구축('24년), 주요 기관 등과 관련 데이터 공유



- (국민안전24) 예방 활동부터 피해지원까지 필요한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국민들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칭)국민안전24’ 구축('24)
 ※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 플랫폼(정부24, 국민비서 등) 뿐만 아니라 민간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과 서비스 연계
- (데이터기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취득·보관·동원 전 과정의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안전점검·진단결과의 통합 및 공개('23)

③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및 산업 육성

- (R&D 확대) 선도적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우수기술의 현장 보급·확산, ‘재난안전 문제해결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제안 유망기술 발굴·지원 등
- (협업강화) 현행 ‘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의체’를 현장 협업형 논의기구로 재편, 민·관 자문단 신설로 상시 협업 강화
- (재난안전산업육성) 재난안전산업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방재신기술 대상 확대), 전문기관(진흥원) 설립 등 민간 혁신 기술에 기반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전략 4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1 실질적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복구지원 강화

- (종합적 회복지원) 종합복구제도* 도입 및 재난기부 활성화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 지원
 - * 생활 인프라 정비, 소통 회복사업(심리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축제지원, 캠페인) 등
- (피해지원 확대) 주택복구 지원금 상향*, 주요 생계 수단 업종(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지방세 신속 감면 규정 신설 등 관련 제도 개선("23)
 - * 전파 기준 16백만원 → 최소 20백만원 ~ 최대 36백만원(연면적 등 고려)
- (재난원인조사 개선) 조사기법 개선(다부처·데이터기반 재난원인조사 통합 시스템), 조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정부합동 조사 시 민간전문가 과반수 포함)("23)

2 피해지원 사각지대 관리 및 지원체계 확립

- (보장확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사망) 추가, 재난 대응에 따른 권리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절차 명확화("23)
- (심리지원확대)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민간전문가 활용 재난심리지원, 목격자·현장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 등 재난구호 심리지원 강화
- (소통·맞춤 지원)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지원*, 국적·직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기준 마련과 안내서비스 개발 등
 - * 2차 피해방지, 시신·유류품 확인 및 유가족 명단 확보·공유방안 마련, 장례·치료 등 지원제도 체크리스트 마련, 일원화된 피해지원을 위한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구축

3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관리기반마련)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안전 통계 개발("25), 관련 제도 정비와 기관 협업으로 안전관리 기반 마련
- (맞춤형 안전관리)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119구급 스마트시스템(119안심콜) ▲(노인) 노인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다문화가족) 가족센터를 통한 안전교육 활성화 등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누구에게나 안전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분야 공공디자인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입·확산
 - * 성별·연령·장애유무 등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제품·서비스 디자인(예:저상버스)

전략 5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1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확대

- (안전교육 강화)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필수 안전체험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전 국민의 자발적 안전교육 동참 유도
 - ※ 안전교육지도(KASEM)에 신종 안전사고 추가 등 사각지대 해소 및 법정 안전교육 내실화
-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1 시도 1 안전체험관' 건립, 체험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온라인 체험관 구축
- (자율 안전역량 강화)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실천 체크리스트 등 자율적인 국민 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 * 부처별로 분산된 대국민 안전정보를 생애주기별·안전분야별 통합제공

2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

- (생활안전 실천) 생활 속 실천 가능한 현장 중심 안전문화 및 안전 무시관행 근절 운동 확대(안전리빙랩(Living-lab), 안전디자인 보급 등)
- (안전문화활동 강화) 중앙·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강화, 자원봉사센터(246개)·민간단체 등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안전문화활동 전개
 - ※ 지역소모임 등 자율단체의 자발적인 안전캠페인 독려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3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

- (신고·제보활성화) 안전신고(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경찰청)) 시스템 통합·연계, 안전신고에 대한 AI기반 위험징후 분석·조치 등 국민신고의 효용성 강화
- (자율적 관리) 민간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기능연속성) 강화를 위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및 안전문화 사회공헌협약(CSR) 확산
 - *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 절차 간소화(소요일수 감축 등),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등
- (민간역량 활용) 민간 구호단체·협회 등과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신속한 자원 동원이 가능한 공급업자를 재난관리 지원기업으로 지정·활용
- (민간자율 예방)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사망사고 80.9%) 취약분야 집중 지원,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 등
 - *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 재발방지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운영, '2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IV. 향후계획

□ 법령 제·개정 (총 40개)

- 법률 제·개정(21개) : 재난안전법, 경찰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주요 개정사항>

- ▶ 재난안전법(행안부) : 축제행사 안전관리 강화, 기관별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의무화 등
- ▶ 경찰법(경찰청), 세종특별법·강원특별법·제주특별법(행안부) :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 ▶ 자연재해대책법(행안부) : 공동체 종합복구 근거 마련, 수방시설 설치관련 별칙기준 등
- ▶ 119구조구급법, 소방기본법(소방청) : 환자이송 추적관리제도 마련, 긴급출동환경 조성 등

※ 법률 제정: 도시하천유역침수피해방지대책법(환경부)

- 시행령·시행규칙 등(19개) :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 이행 관리 계획

- (추진체계)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개편지원단」 운영(기간 : '22.12월~)
- (이행계획) 확정예산·일정 등을 반영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과제 수정시 전문가·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조정
- (이행점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주재 점검(격주), 안전회의체 활용 점검체계 가동*(법률안 제개정 및 예산 확보, 추진일정 등 점검)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장관),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재난안전 관리본부장) 등 활용

□ 대국민 소통 계획

- (전용 웹사이트 운영) 국민이 동 대책의 내용과 추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행안부 홈페이지) 구축·운영
- (주기적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요소 발굴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다양한 창구* 운영

* △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 ON국민소통(www.onsotong.go.kr) 등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BI(Brand Identity) 활용>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5개의 원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및 중앙부처-지자체-경찰-소방-국민 등 다양한 주체를 동시에 의미

서로 협력하여(교집합 부분)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받들겠다는 의미

참고1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 경과

□ 이태원 참사 발생 ('22.10.29.) 및 사고 수습

□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22.11.7.)

<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시 VIP 말씀 >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TF」 발족 및 활동('22.11.18.~)

○ 구성: ▲(단장 / 부단장) 장관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개 분과) ①초기대응·선제적재난관리, ②지역 역량 강화, ③과학 기반 재난안전, ④제도개선·안전문화

○ 주요 활동

- 장관 주재 TF 분과별 추진과제 보고 (12.12., 12.14.)

- 장·차관 주재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전체회의 및 합동 토론회

* 1차(11.18.)·2차(11.25.)·3차(12.1.)·4차(12.15.)·5차(12.22.)·6차(12.30.)

- 분과·주제별 전문가 자문회의 ('22.11월 ~ 12월, 총19회)

*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밀집인파관리, 경찰·소방 상황관리, 신종재난 식별·대응 등

□ 각종 의견수렴 및 협의

○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22.11.15. ~ 12월말)

* '안전신문고'(1,672건, ~12.31.) 및 'ON국민소통(220건)'를 통해 의견수렴(총 1,892건)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및 의견 반영('22.11.24. ~ '23.1.17. 55일간)

참고2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국민제안 검토 결과

□ 국민제안 개요

- 안전신문고의 ‘국민안전제안’과 ‘ON국민소통’ 창구를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

구분	안전신문고	ON 국민소통
기 간	’22.11.15. ~ 12.31.(46일간)	’22.11.25. ~ 12.5.(10일간)
접수건수	1,672건	220건
분류방법	툴(tool)을 통한 키워드로 분류	게시글 동의(좋아요) 30건 이상

□ 국민의견 및 반영사항

국민의견	대책 반영
▶지역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기관 통합대응 체계 마련	①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담당 공무원 대상 전문성 교육과 역량 제고	② 지자체 재난관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③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반복적인 교육·훈련	④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체계 및 매뉴얼 개선
▶취약계층 대책 필요	⑤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성인대상 교육기회 마련	⑥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대상·분야 확대
▶안전캠페인 및 다양한 홍보 등, 지역주민과 함께 위험지역 발굴	⑦ 국민 참여에 기반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향후 계획

- 국민제안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주기적 공개 등 대국민 소통 강화